



[해설]
SK-LG 분쟁
과열된 2차전지
선두 경쟁
03



Economy

코스피	2049.20 (0.00)	코스닥	630.37 (0.00)
금리 (국채 3년)	1.26 (+0.02)	환율 (원-달러)	1191.00 (-2.30) (14일)

길 잃은 産銀, 돌연 ‘産輸 합병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웃사촌
두 국책은행의 갈등
① 이동결은 왜?

정부와 교감없는 합병론에 산은 역할 유명무실 눈총도 수은, 대외전문성 침식 우려 이동결 회장의 무능력 비판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과 이동결 KDB산업은행 회장(작은사진). /연합뉴스

추석 명절 전 이동결 KDB산업은행 회장이 ‘사건’을 전제로 수출입은행과의 합병론을 꺼냈다.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나 각 기관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교감도 없이 ‘뜬금없는 주장’을 한 셈이다. 산업은행 회장이 정무와 교감도 없이 정책금융기관의 합병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볍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에선 개발금융시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태어난 산업은행(이하 산은)의 역할이 유명

무실해지고 있다는 자체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굽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민간 금융사의 투자금융(IB) 역량이 강화되고, 기업이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서 정책·투자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산은의 역할이 그 존재감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도저도 아닌 산은 정체성
산은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기관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다.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수많은 부실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지난 2016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는 총 426곳이었다. 산은의 자체 분류법을 토대로 보면, 대기업이 51곳, 중소기업이 355곳으로 사실상 차별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가 정상화

되면서 기업 구조조정이란 산은의 주요 기능은 약화됐고, 폐일수 있는 위험가중자산이 급증하면서 올해 1분기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35%포인트 떨어졌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민영화를 목표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로 분리됐다가 2013년 정책금융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다시 합쳐졌다. 지난 2011년 부임한 강만수 전 산은 회장이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소매금융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미 관료화돼 생산성이 떨어진 조직문화는 차치하고라도, 지점망이 약한 탓에 기존 민간 금융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은이 2000년대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력을 잃었다고 지적한다. (3면에 계속)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제4회 물류&모빌리티 포럼’

스마트물류 향한 한발 전진

메트로경제가 오는 9월 26일(목)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스마트물류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제4회 물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합니다.

메트로경제는 지난 3회까지 물류산업에 초점을 맞춰 포럼을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물류산업과 모빌리티산업의 융·복합 추세에 주목해 포럼 주제를 ‘물류&모빌리티 포럼’으로 확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주요 산업에서 불고 있는 가운데 물류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물류집하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자율자동차를 활용한 운송 효율화,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창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블록체인·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이 물류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산업과 물류 산업의 융합 추세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두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와 정책 과제 등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물류산업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One more step Smart Logistics (스마트물류를 위한 한발 전진)
- 일 시 : 2019년 9월 26일(목) 13~17시30분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 등 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주택담보대출〉

1%대 주담대 환승 찬스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16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금리변동 위험과 이자부담을 덜어 주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신혼부부·다자녀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으면 대출금리가 연 최저 1.25%까지 내려갈 수 있고 1금융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매력 요소다.

연 1%대의 고정금리로 환승할 수 있지만 소득 기준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과 신청 방법,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각에서는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취지이지만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이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를 거친 뒤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금액은 20조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원으로 완화된다. (2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89@



청명한 가을 하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위로 뭉게구름이 떠 있다.

/연합뉴스

늘어가는 한국... 2050년 복지 의무지출 350조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장성 강화, 고령화 등 영향
국민연금 급여액 年 6.4% ↑

2050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350조 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급여액도 연 6.4%씩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분야법정지출이 본예산기준 올해 10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50조2000억원으로 40조원가까

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연금급여액 급증(올해 23조원→2050년 160조원)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급여비 증가(올해 24조원→ 2050년 60조원)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올해 30조→2050년 57조) 증가 등이 있다.

실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국민연금 포함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

무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까지 연 평균 30만명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2020년 44만명, 2021년 41만2000명, 2022년 43만8000명, 2023년 47만2000명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예산 투입량도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7조6000억원 흑자에서 내년 6조6000억원 적자로 바뀐 뒤 2050년에는 237조4000억원(GDP 대비 -7.1%)으로 적자폭이 커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국가채무가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5.6%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경제학계 등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축소와 세수 증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 기업이 법정 퇴직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폐지하고, 연령상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